

빛 더미 앓으면 나몰라라... 자구책 없이 '엑시트' 악용 우려

유통업계, 기업회생 신청

경영실패에도 자구 노력 없어
채권자 등 제3자 피해 확산
“관련 시장 전반 신뢰저하 야기”

홈플러스에 이어 명품 플랫폼 발란까지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유통기업들이 기업회생 신청 제도를 남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채권자들이 채무를 변제받을 가능성이 낮아져 제3자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와 명품 플랫폼 발란이 연이어 유동성 위기로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전반적인 경제 불황이 근본 원인으로 작용했으나, 경영진들이 기업회생 절차를 악용한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금감원은 이날 홈플러스가 신용평가 결과 발표 전에 이미 기업회생 신청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모회사인 MBK파트너스는 단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발란 본사가 있는 공유오피스 로비에 '발란 전 인원 재택 근무'라고 적힌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뉴스

기신용등급 강등이 확정된 지난 2월 28일부터 회생 절차 신청 준비를 시작했다고 밝혔으나, 금감원은 이보다 더 이른 시점에 준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한 발란의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발란은 지난 주까지만 해도 기업회생신청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전혀 준비한 바 없다”고 답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기업회생

을 신청했다는 입장문을 밝혔다. 지난 31일 기업회생 신청 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발란 관계자는 “티메프 때도 받아줬는데 우리라고 안 받아주겠냐”라는 답변을 내놨다.

이에 기업의 경제적 회복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안정 유지를 위해 마련된 법적 보호 장치가 손쉬운 빛 탕감의 수단으로 전락할 경우, 제도의 근본 취

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타업계 관계자는 “모럴 해저드가 만연할 경우 경제학적 관점으로 봐도,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기업회생이라는 제도적 보호 장치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시장 경쟁력이 약화되고, 채권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번 발란에 정산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고 밝힌 채권자 A씨는 역시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는 소식에 망연자실했다”며 “채권자 입장에서는 기업회생 신청 자체가 무책임하게 느껴진다. 가족 경영을 해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무책임한 경영 뒤에 기업회생 신청으로 빛을 탕감해버리면 그만인 것이냐”고 토로했다.

한편, 유통업계에서는 최근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간 동안 여러 차례 굶직한 기업회생 절차 신청 사례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7월 발생한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다. 국내 유통 플랫폼이었던 티몬과 위메프는 입점사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결국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이로 인해 다수의 협력업체와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으며, 유통

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티몬과 위메프의 모회사인 큐텐 소속 전자상거래 업체였던 인터파크커머스도 연이어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며 논란이 확산됐다. 티몬과 위메프의 유동성 위기가 시장 신뢰 추락으로 이어지며, 결국 인터파크커머스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같은 사건들이 발생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홈플러스와 명품 플랫폼 발란이 유동성 자금 경색을 이유로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약 9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총 5개의 유통 기업이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셈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심사에서 기각되는 경우도 있고, 개시 결정을 받고 나서 실사를 거친 뒤 인가를 받기 전에 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도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 유동이 어려워 서울회생법원에 손쉽게 회생 절차 신청을 하는 행태 자체가, 특히 유통업계에서는 시장 신뢰를 저하시키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일 많은데 처우는 그대로... 현장기피 여전

조선업계 '인력난'

지난해 조선업종 미취업률 14.7%
“작업환경, 보상체계 개선 서둘러야”

국내 조선업계에 수주 훈풍이 불고 있지만 정착 현장을 책임질 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 지방 근무를 꺼리는 분위기와 조선업 전반에 깔린 기피 정서가 겹치면서 새로운 인력 유입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조선사들은 근무 여건 개선과 복지 인프라 확충에 나서고 있으나 상대적 낮은 처우와 지방 근무 거부감 등의 구조적인 문제는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

31일 조선·해양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조선업종의 미취업률은 14.7%에 달했다. 인력 부족의 주된 이유는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는다는 점이 꼽혔다.

HD현대중공업 조선해양 부문 직원 수는 2023년 1만257명에서 지난해 1만1194명으로 증가했다. 삼성중공업 역시 같은 기간 9308명에서 9837명으로, 한화오션은 8892명에서 1만202명으로 각각 인력이 늘었다. 그러나 고용 인력이 증가했음에도 조선사들의 성장세에 비해서는 생산 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 205억 6000만달러를 수주해 연간 수주 목표인 135억달러의 152.2%를 초과 달성하는 등 신규 일감이 빠르게 쌓이고 있다. 이에 HD현대그룹의 조선 3사(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조선·HD현대삼호중공업)는 생산기술직 공개채용을 진행 중이다.

삼성중공업도 최근 아시아 지역 선주로부터 초대형 에탄올반선 2척을 수주하며 올해 수주 목표액 14조원 가운데 약 19%를 이미 달성했다. 이에 공채 및



울산지역 조선소 전경.

경력직 채용 전형을 통해 인력 충원을 이어가고 있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총 88억 6000만달러를 수주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고난도 용접·가공 등 생산 공정에 투입할 전문 생산인력 확보에 비상이다.

◆ 조선사들 정주여건 개선 '구슬땀'

조선사들은 현장인력 부족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지방 근무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정주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부산에 엔지니어링 센터를 개소했으며 HD현대는 경기도 성남시에 글로벌 R&D(연구·개발) 센터를 조성해 고급인력의 지역 근무 선택지를 확대했다.

현장 직원들 사이에서는 “임원의 보수를 일부 덜어내면 인력난 해소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조선 빅3(HD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한화오션)의 일반 직원 평균 연봉은 9100만원인 반면 임원 평균 연봉은 2억4300만원으로 일반 직원 두세명 연봉을 합친 수준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업계 임원의 보수가 상대적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은 편은 아니며 생산직

과는 입장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열악한 작업 환경에 비해 임금 수준이 높지 않아 국내 인력이 유입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외국인 현장 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 외국인 근로자들은 일정 기간 근무 후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어 숙련 인력 확보의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따른다.

이에 조선업계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가 나서 국내 기술인력 양성 및 조선업 인식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은창 산업연구원 박사는 “국내 인력의 경우 지난 2016년 조선업이 위기를 맞이했을 때 단행한 구조조정에서 겪은 트라우마가 여전히 크다”며 “상황이 변해도 조선소가 안정적인 직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내국인을 장기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상황 변동에 따른 단기 수요에는 외국인 인력을 유연하게 투입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해외 생산이나 위탁 생산처럼 유연한 생산체계를 갖춘 인력 구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조선업은 민간 기업이 모든 리스크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중국은 국영 조선사를 중심으로 대규모 정부 투자가 이뤄지고 있어 국내 기업이 경쟁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에 있기에 직접 지원하기는 어렵지만, 간접적으로라도 조선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차현정 기자 hyeon@

정치·경제 불안 고조... 달러 강세 '부채질'

환율 고공행진

투자자들 달러보험 재조명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원·달러 환율이 달러보험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달러가 지속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급이야말로 달러보험 가입의 적기라는 판단에서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 원·달러 환율은 1472.9원에 거래를 마쳤다. 연중 최고점이자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1483.5원)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다.

이 같은 환율 급등(원화값 급락)은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관세 우려, 국내 정치 혼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트럼프의 대규모 관세 부과와 무역장벽 강화 정책이 국제무역을 위축시키고 기업·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달러를 찾는 수요가 크게 늘었다. 아울러 국내에서도 지난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치적 불안정이 장기화되자 경제 불안감이 커졌고 원화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대외적 요인에 의한 달러 강세와 대내적 약세에 기인한 원화 약세가 맞물리면서 환율 상승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 배경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올해 상반기에 1400원대 중반의 높은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큰 변동성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달러 강세에 따라 금융시장에서는 달러 자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특히 달

리보험은 환율 변동에 민감한 투자자들 사이에서 재조명받고 있다. 달러보험은 보험료를 달러로 납입하고 만기 보험금을 달러로 지급받으므로 환율 상승에 따라 원화 대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상품으로 꼽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환율이 급등하면 해약이나 중도인출을 통해 환급금을 현금화하려는 가입자들이 늘어난다”며 “반대로 앞으로 달러가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되면 새로 가입해 장기적으로 환차익을 노리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보험사들도 달러보험 상품을 다양화하면서 시장은 더 활발해지고 있다. 외국계 보험사인 메트라이프생명과 AIA생명은 달러종신보험과 달러연금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국내 보험사로는 KB라이프생명이 달러보장보험, 달러연금보험, 달러변액연금보험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달러 강세가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 전망이 나오면서 지급이라도 서둘러 달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외화보험 판매량도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화보험 판매건수는 4만770건으로 전년 1만2553건 대비 3배 이상 늘어났다. 판매 금액 역시 같은 기간 7637억원에서 1조6812억원으로 2배 넘게 상승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달러보험은 가입, 납입, 거치 기간 등을 포함해 거의 20년 가까이 봐야하는 상품이기에 단기적인 환율 등락보다 장기적인 관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환율 변화에 따라 달러보험의 수익률이 변동하지만 환율이 높다고 가입을 장려한다면 불완전 판매의 위험이 있다”며 “달러보험은 안전자산인 달러 자산을 마련하는 것에 더 도움이 되는 상품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주희 기자 gh471@